

W:WOOSUNG

2024년 1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1월 2주차 HOT ISSUE

- 2024년 축산 분야 내에서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 순천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1호 지정

2024년 축산 분야 내에서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주요 축산물 대상으로 PLS 시행

소·돼지·닭·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대상으로 PLS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사용이 허가·등록된 동물약품의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을 사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kg당 0.01mg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되면 6개월간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가 이뤄진다. 또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전량 폐기 처분되며,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2024년 축산 분야 내에서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이거나 인체용과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와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등 동물의약품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올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했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했으며, 올해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한다.

2024년 축산 분야 내에서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곤충가공업과 곤충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가 곤충 생산업도 포함해 입주가 허용된다.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돼야 한다.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해 시행된다.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축산 분야 내에서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활동별 지급 단가는 △중간물떼기(15만원/ha) △논물 얇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원/ha) △저메탄사료 급이(2만5천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5천원/두) 등이다. 축산의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돼지 사육 농가가 대상이다. 올 1분기 시작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 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과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매년 반복 발생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한다.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저탄소 녹색축산 시대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저탄소 축산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도 25%로 늘림과 동시에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770만톤 수준으로 줄인다. 이는 2018년 940만톤 대비 약 18% 감축한 수치이며 2030년 예상 배출량 1천100만톤의 30%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도 촉진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해 축산농가의 이행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순천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1호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게 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제1호로 순천대학교를 지정했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 받은 제품들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 챔버나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보유하고 메탄저감제 동물 사양 시험이 가능하다고 검증된 곳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철저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로 신청기관인 순천대학교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사진〉의결을 거쳐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메탄저감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메탄 저감 효과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메탄저감제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 연구팀은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 2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우, 젖소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학교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3년 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지정은 메탄저감제 보급을 준비하는 사료 회사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에 관심 있는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메탄저감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총력대응…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력대응을 펼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4일과 5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던 ASF가 최근 남하추세를 보이며 경북 북부권역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건 관리 등 포획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봤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8일 기준 전국에서 27건이 확진되는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란계 사육이 많은 중부권 10개 시군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하천 주변 산란계 농장과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은 주요 국도 주변의 소독을 강화하고 오리 계열화 사육 농장에 대해 CCTV 등을 활용해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올해 겨울 김제와 익산 지역 사례를 볼 때 산란계 농장에서 한번 발생하면 주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천안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등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닭고기 자급률 80%선 붕괴... '사상 최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할당관세 정책에 닭고기 자급률 80% 선이 붕괴됐다.

정부는 국민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22년부터 20~30%로 책정돼 있는 수입 닭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 현재까지 햇수로 3년째 추진 중이다.

이에 닭고기 수입량(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은 지난 '21년 12만4천25톤에서 이듬해인 '22년에는 18만8천300톤, 이어 '23년에는 23만972톤으로 급격히 증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이런 수입증가의 여파로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지난해 닭고기의 자급률 80% 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해 닭고기 자급률이 76.9%(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로 집계된 것이다.

닭고기 자급률은 지난 12년간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살펴도 '20년 88.1%, '21년 87.0%, '22년 82.8% 였었는데 지난해 76.9%까지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같은 닭고기 할당관세 추진의 명분이었던 물가 안정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에 따르면 정부가 할당관세를 진행치 않았던 지난 '22년 상반기(1~6월) 닭고기 가격(생계유통시세, kg당)은 1천873원, 할당관세를 추진한 2022년 하반기(7~12월) 1천812원, 연중 계속된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는 2천238원, 하반기 1천887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육계업계가 지속해서 피력해온 '할당관세에 낭비되는 예산을 농가와 업계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닭고기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수입 닭고기에 대해 정부가 할당 관세를 지속해서 추진, 부분육 발골업체들이 생산하는 정육, 가슴살이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면서 물량을 줄이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할당관세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수입육 점유율을 급속도로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북 의성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산란계 36만40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전국 산란계 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